

보도시점 2024. 7. 24.(수) 12:00  
(2024. 7. 25.(목) 조간)

배포 2024. 7. 24.(수) 09:00

## 전파인증, 기업은 편리하게 국민은 안전하게 개선한다.

- 전자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 대상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 등 기업 부담 완화 -
-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국민 안전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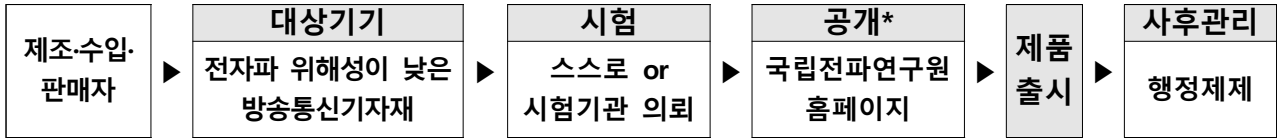
### □ 국내 ICT 기업의 전파 인증 부담 완화

#### ①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

현행 적합성평가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인증을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ICT 제품의 융·복합화,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 해 신제품 출시 지연, 인증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조명기기, USB 또는 건전지 동작 제품)은 기업(제조자 등)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 < 자기적합확인 제도 >



\* 정부의 인증·등록을 생략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자기적합확인 사실 공개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국내 ICT 기업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약 2만 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ICT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 매년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약 5만 건 중 2만 건이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 출시기간 단축, 인증·등록 수수료 절감(약 11억 원) 등 전망

**조치**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제77조의6」 등 개정

### ②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 같음 과징금 도입으로 시험 지연 문제 개선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 판매자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업무정지 처분에 같음한 과징금(최대 5억 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과징금 산정방법>

$$\text{과징금 부과금액} = \frac{(\text{전년도})\text{매출액}}{365\text{일}} \times \text{업무정지일수}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영업이익률})$$

**조치** 「전파법 제73조」, 「전파법 시행령 제121조, 별표 27의2」 개정

### ③ 적합성평가의 표시(인증마크 등) 방법 개선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소비자가 적합성평가 인증 획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의 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제품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으나,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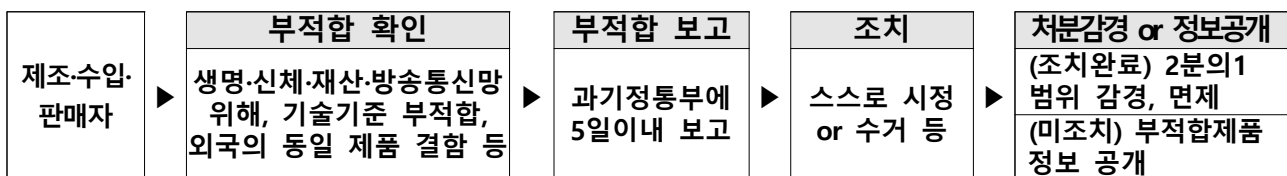
**조치**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5」 개정

## □ 소비자 안전 강화

### ① 부적합 보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유통 제품의 관리 강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결함을 확인하면 과기정통부에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의 절차,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보고 절차와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부적합 보고와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제조자 등)이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도록 하고,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신속한 A/S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 부적합보고 절차 개선 >



※ 개정 전에는 부적합 보고의 기한, 미보고 시 제재 처분 등 미비

**조치** 「전파법 제58조의11」,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4」 등 개정

## ② 외국제조사 등의 국내대리인 허위 지정시 적합성평가 취소

현재도 외국의 제조·판매 기업 등의 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파법에 근거를 규정하고, 국내 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하였다.

**조치** 「전파법 제58조의13」, 「전파법 시행령 별표23」 개정

## ③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체계 마련

현재까지는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 국민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 공공기관 등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먼저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대물·대인 직접 손실, 간접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 드론 대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기관이 불법 드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 「전파법 제29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의4 및 별표5의2」 신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총괄 부서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책임자	과 장	윤희봉 (044-202-4950)
		담당자	사무관	심향섭 (044-202-4951)
		담당자	사무관	김현호 (044-202-4956)
담당 부서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책임자	과 장	구교영 (061-338-4700)
		담당자	사무관	양미숙 (061-338-4710)



구분	법 개정	시행령 개정
자기적합 확인제도 도입	○ 전파 위해성이 낮은 기자재는 제조사 등이 전자파 시험을 스스로 하고, 정부에 인증·등록 없이 인터넷에 공개 시 제품 출시	○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을 간소화* 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할 사항** 및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국가통합인증마크, 모델명, 관리번호만 기자재에 표시(그 외는 설명서에 표시) ** 기자재 명칭, 관리번호,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등 공개
시험기관 과징금 부과	○ 시험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제조·판매사업자)의 불편 개선	○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 (법제처) 준용 $\text{과징금} = \text{업무정지기간} \times \frac{(\text{전년도}) \text{매출액}}{365\text{일}}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영업이익률})$
부적합 보고	○ 부적합보고 의무 위반 시 적합 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실히 이행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 위반 횟수별 과태료(단위: 만원) - 1차(100), 2차(200), 3차(300) ○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 ① 생산·수입·판매·사용중지는 1/2 범위 ② 취소는 생산·수입·판매 사용중지(4개월) ③ 생산·수입·판매·사용중지(1개월)는 면제
국내 대리인 지정	○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 국내 대리인 허위 지정 시 적합성 평가 취소
전파차단장치 피해보상	○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민사 피해 발생시, 先 보상, 後 구상권 행사(불법 드론·무선기기 등 사용자 대상) 근거 마련	○ 민사 피해 유형별 대물·대인 직·간접 손실 세부 보상금액 산정기준